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

이 돈 중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I. 머리말

박물관이란 일반적으로 유물자료를 수집·보관·관리·전시하는 기관이지만 오늘날 박물관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학술연구기관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져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반시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산업사회와는 달리 21세기 문화의 시대는 문화적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라 할 수 있으므로 국민 누구나 자연스럽게 문화적 환경에 접할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 같은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과 같은 핵심문화시설을 장기적인 계획하에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이후 박물관으로 표현)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 박물관의 현황, 현재 추진 중인 박물관정책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박물관의 개념과 기능

1. 박물관의 개념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의 정관과 전문직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Ethics, 1986)에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조는 “박물관이란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ICOM 정관 규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박물관은 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이며 궁극적으로 사회발전과 일반국민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물의 수집·보존, 전시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적 공익 시설로서 시민을 떠나서 기능 할 수는 없다.

2. 박물관의 기능

박물관의 일반적인 기능으로서는 첫째, 박물관은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외에 최근에는 문화산업발전의 원천으로서 역할이 강조된다.

둘째, 박물관은 항구적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이외에 강연회, 토론회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반공중의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박물관에서 현재 「토요문화강좌」, 「특설강좌」, 「주부문화강좌」, 「노인문화강좌」, 「청소년박물관교실」과 「움직이는 박물관」 등의 각종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박물관은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관광에서 박물관 탐방 등 역사·문화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관광의 질적 고급화와 세계의 문화체험 욕구의 증대에 따라 대규모 박물관은 물론,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문박물관도 주요 관광코스가 되어 관광객 유치와 경제효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지역의 핵심 문화인프라로서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한다. 박물관은 각 지역고유의 역사, 풍속, 문화, 자연, 산업 등의 연구와 주민의 교육기능 수행 등 핵심적인 문화기간시설로서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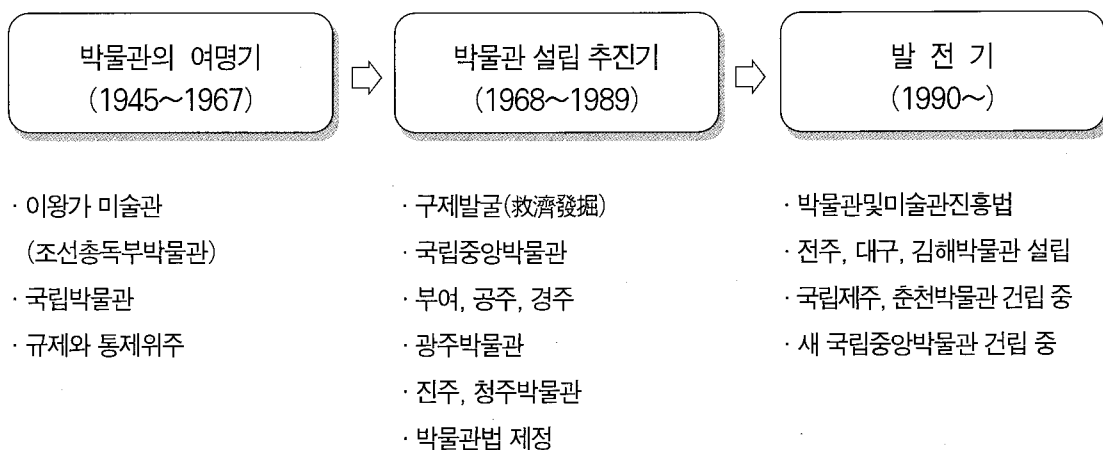
1992년 2월 전면개정 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1항에 박물관의 사업수행의 예가 규정되어 있지만, 박물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과 국민여가 활용 장소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Ⅲ. 한국의 박물관 정책

1. 박물관 현황

가. 박물관 연혁

〈국립박물관의 시대별 변화〉



박물관은 광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조차 광복이후 다섯 차례나 이전되는 등 제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되며 여섯 차례 이전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박물관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908년 황실박물관(추후 이왕가 미술관으로 개칭)에 기원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960년대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각종 토목, 건설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유물파괴

방지를 위한 구제발굴(救濟發掘)이 많아지면서 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1970년대 부여, 공주, 경주박물관의 신축이전, 광주박물관의 개관과 함께 공·사립박물관 설립유도정책에 따라 부산시립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등 자치단체와 민간차원의 박물관 설립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은 경제적 부(富)보다는 문화적 부의 성취라는 문화주의로서 국력을 신장한다는 기치 아래 1984년에 “박물관법”이 제정되었으며, 박물관법의 제정은 정부의 박물관에 관한 시책이 제도화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영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1845년에 박물관법을, 일본은 1951년에 제정).

1990년대에 문화부가 독립되고 생활문화국내에 “박물관과”가 설치되었다. 또한 ‘움직이는 박물관’ 정책이 시행되고 국립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 김해박물관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이 개관준비중에 있으며 춘천박물관과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건립중에 있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은 1938년 간송 전형필 선생의 간송미술관, 1982년 호암미술관, 1984년 호암갤러리 등이 설립되었고 현재 119개가 등록, 운영 중이다. 사립의 경우 국립과는 달리 그 동안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1991년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소규모 박물관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이 이루어졌다.

나. 박물관 현황

박물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고, 전시내용에 따라 종합, 전문, 특수박물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국립 25개, 공립 38개, 사립 119개 그리고 대학 박물관 81개 등 총 263개가 설립되어 있다. 이는 선진외국에 비해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증대하는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충족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미국 4,609관, 일본 2,991관, 캐나다 1,352관, 프랑스 1,300관
- 1관당 인구수 : 미국 49,000명, 일본 39,000명, 캐나다 21,000명,
프랑스 46,000명인데 비해 한국은 197,000명

또한 지역간 시설의 편차가 심하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전체의 42%) 문화예술발전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어 왔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국·공립박물관 건립을 꾸준히 추진해 상당한 결실을 본데 비해 인문계통의 종합박물관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전문박물관 육성에 소홀한 감이 있다. 우리나라 전문박물관은 국립보다는 공립이나 사립박물관에서 그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박물관 건립은 지역이나 유물의 특성을 살린 전문박물관위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박물관은 종합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과는 달리 일반인이 쉽게 흥미를 느끼고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기업에 의해 설립된 일부 박물관을 제외하면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외국의 경우 상점 및 식당의 운영 등 각종 상업활동과 스폰서십(Sponsorship)이 주요 수입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전문박물관은 공립의 경우 '96년부터 영동난계국악박물관, 익산보석박물관 등 43개관이 국가지원하에 건립 중에 있으며, 사립은 '참소리축음기오디오박물관', '목아불교박물관', '화폐박물관' 등 119관이 설립, 운영 중이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어온 과학, 기술, 산업 분야의 관련 전문박물관이 극히 빈약한데, 이의 확충이 절실하다 하겠다.

2. 한국의 박물관 정책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은 '국민들의 문화복지(Cultural Welfare) 증진'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형성' 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발전' 등을 통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동안 한국의 문화정책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문화예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념과 가치, 정책 프로그램이 변화되어 왔다.

'98년도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 이란 기조하에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이 담긴 '새문화정책' 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관련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목표〉

시 설	운영 중	2011년까지 목표
박물관	263관	500관으로 확충(인구 9만명당 1관 수준) ※ 1도1미술관 2008년까지 9개도에 각 1관이상 확충
도서관	400관	750관으로 확충(인구6만명당 1관 수준)
지방문예회관	100관	232관으로 확충(기초자치단체당 1관 수준)
문화의 집	77개소	500개소로 확충

금년도에 89개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총5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중 공립박물관 지원은 21개소에 159억원 지원하여 현재 43개의 공립박물관이 건립 중에 있다.

가. 박물관 기반시설의 확충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박물관 정책은 바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의 확충이라고 본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박물관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공립박물관 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립박물관 건립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한 후, 세계적 수준의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여 국민들에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수준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통일 한민족 시대를 대비하고자 용산에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핵심전당으로서 향후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의 기본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금년 6월에 국립제주박물관이 개관하며, 국립춘천박물관도 내년이면 개관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 기 간 : '93 ~ 2003년
- 규 모 : 부지 92,936평, 연건평 40,616평(건축면적 13,745평)
- 총사업비 : 3,291억원(공정율 : 34%)

○ 국립제주박물관 건립

- 기 간 : '91 ~ 2001년(6월 16일 개관 예정)
- 규 모 : 부지 15,298평, 연면적 2,742평
- 총사업비 : 331억원

○ 국립춘천박물관 건립

- 기 간 : '94 ~ 2002년
- 규 모 : 부지 16,623평, 연면적 2,592평
- 총사업비 : 381억원

또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경우 '96년 기본방향 연구용역, '97 전시계획, 운영관리프로그램, 표본자료 수집에 관한 기초연구 이후 중단되었지만,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어 향후 사업추진이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96년 기본방향 연구 기준)

- 기 간 : '95 ~ 2020년
- 규 모 : 부지 100,000평, 연면적 30,000평
- 총사업비 : 6,500억원

2) 공립박물관 건립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각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필수적으로 박물관이나 도서관, 문예회관을 건립하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문화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일단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본다.

공립박물관건립은 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원 요청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총사업비의 30%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은 총 38관이며 현재 43개관이 건립중에 있다. 국립박물관과는 달리 전문박물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영동난계국악박물관, 문경석탄박물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올해 21개관에 총 15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립박물관 건립이외에 문화관광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도 1미술관 건립이 있다. 매년 1개도에 1관씩 9개관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경남도립미술관 건립사업에 국비지원 하였다.

나. 전문인력 양성

박물관을 건립하고 난 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운영인력이다. 박물관은 귀중한 유물을 다룰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물관 등록요건에도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박물관의 질적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래 전부터 자격증 제도를 실시 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근거하여 2000년 3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처음 도입하였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준학예사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고도 실무경력이 없어 자격증이 교부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향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2001년 5월 현재 3급 정학예사 181명, 준학예사 6명에게 자격증 발급)

다. 법적·제도적 보완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적용대상 시설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관, 전

시관, 기념관, 교육관, 향토관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국가 대표박물관으로 규정하여 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물 대여 요청시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외에 등록된 국·공립박물관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였으며, 정부의 규제사무의 완화로 시·도 지사의 연간 의무개방일수를 60일로 단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립등록박물관의 고액 관람료 시정명령, 등록박물관에 운영장부 비치 등 그 동안 미비되었던 법적인 장치를 정비하였다.

라. 운영의 내실화 촉진

문화시설로서 박물관은 현대적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능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정부에서는 '98년부터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평가하여 상호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프로그램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박물관·미술관에는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이 소수의 연구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정신을 고취하여 고객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매년 움직이는 박물관, 박물관문화학교, 문화유적답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조하여 박물관의 관광상품화도 추진하고 있다.

마. 사립박물관 설립촉진

국·공립박물관이 대규모 박물관으로서 지역문화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 사립박물관은 국민들이 가장 근거리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이다. 개인, 기업, 법인 등이 적극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설립시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면제,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바. 정보화 촉진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가이다. 정부는 유물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난 5월 7일 전국의 26개 박물관의 유물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국립박물관에서 사립박물관 구축을 통해 직접 박물관에 오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외국의 박물관 지원정책

지금까지 우리나라 박물관정책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외국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아직 지원정책이 부족하다. 여기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박물관정책 수립에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 박물관 담당 중앙조직

프랑스는 문화홍보성 박물관국이 있으며, 미국은 박물관서비스연구소에서 예산전액을 박물관에 지원한다.(정부 예산의 약 0.17% 차지)

나. 공·사립박물관 지원

각국은 공·사립박물관 건립·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박물관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교부세에 도·부·현립 박물관 지원경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91년부터 박물관 설립자에게 저

리 용자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방박물관은 지출예산의 50%를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구입·보존·전시·홍보·교육 등 박물관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 받는다.

미국은 NEA(연방정부예술기금), NEH(연방정부인문과학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NEA의 경우 매년 해당 박물관에 영구 소장품 15만불, 특별전시회 10만불, 전문가 양성 8만불 등을 상한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각국은 박물관 운영을 위해 협회 등의 구성을 적극 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박물관 정책에 있어 하부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면을 보인다.

일본의 박물관협회와 우리 나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본	한 국
설립년도	1928	1991
직 원 수	17명	2명
정부 보조금	연 1,100만엔	18,500천원
주요 활동 내용	「박물관 연구」등 주요 저서·기관지 발간, 직원 연수교육 실시, 박물관 대회 개최 등	박물관인대회, 학술대회, 소식지 발간 등
정부지원 사업	박물관 대회, 지도자 연수회, 자료 조사, 수집·연구활동 등	전국박물관인 대회
지 부	10개지부	없음

다. 전문인력 양성

프랑스는 정부의 문화성에 박물관국을 설치하여 6개 분야에서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인증시험을 합격해야 큐레이터로 활동 가능하다. 박물관 근무자를 교육시키는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루브르박물관에 부속된 루브르박물관 학교가 있다.

영국은 대학과 박물관협회의회 또는 내셔널 갤러리 등에서 수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직원은 박물관협회의회 자격시험 통과가 필수적이다.

일본에서 학예원 양성의 중심적 역할은 대학이며, 학예원 자격인정은 시험방법과 무시험 인정방법 2 종류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박물관과 관련된 기구로 미국 박물관협회, 미국국립예술기금(NEA), 미국 해외공보처, 스미소니언연구소 등이 있다. 박물관협회가 대학과 박물관을 연결하여 학예연구직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뉴욕대학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시카고대학과 시카고자연사박물관 등에 교육시스템이 설치 운영중이다.

Ⅳ. 21세기 박물관정책 방향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박물관정책과 외국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21세기 문화의시대에 박물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향후 박물관정책 방향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정부의 새문화정책 기본방향을 우선 살펴보기로 하자. 박물관정책이 지향하는 바와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정부가 지향하는 새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창의성 증진을 통한 성숙한 지식정보사회 구축, 둘째, 문화정책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한 세계문화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출, 셋째, 북한과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통합 증진 및 민족공동체 형성, 넷째, 문화복지 환경조성을 통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증진, 다섯째, 문화산업육성을 통한 예술활성화와 국제문화경쟁력 강화, 여섯째,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정책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박물관정책도 이러한 조류를 반영하여 추진 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박물관·미술관의 지속적인 확충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박물관 1관당 인구수가 너무 많고,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고고·미술박물관 중심이어서 더 많은 전문박물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특히 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을 비롯하여 각종 전시관, 사료관 등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 설립을 장려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지원규모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4조에 의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4조제1항)

2.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국민의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지원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 지원하는 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 추진할 것이다. 학예사의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박물관·미술관 전문직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의 확대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설치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학 등과 연계가 부족한데, 대학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박물관 인력을 양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박물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인력의 상호교환으로 유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3. 유물 정보화 및 사이버박물관 구축

정부가 지향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춰 유물의 정보화 및 사이버박물관 구축, 박물관 관련 디지털콘텐츠 개발확대로 박물관의 대중화와 문화를 통한 창의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자한다. 특히 전국 박물관을 연계시킨 문화정보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새 국립중앙박물관 개관과 맞춰 유물의 DB화, 사이버박물관 구축을 통해 국민과 더욱 가까운 박물관이 되도록 할 것이다.

4. 세제지원 등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현재 박물관 설립시 개발부담금 감면, 농지조성비 면제,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이 있지만, 실제 사립박물관 설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립비에 대한 지원이다. 사립박물관에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소한 일정한 금액의 저리융자는 필요하다고 본다.

5. 전국민 서비스 강화

움직이는 박물관·미술관 운영활성화를 통해 산간벽지, 산업체, 근로현장 등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박물관 및 유물 향유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김포공항, 제주공항에 작은 박물관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향후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동 사업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 개최와 주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필요하다.

6. 기반 시설의 관리, 운영 평가

현재 매년 박물관·미술관 등 600여개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리,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문화시설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경영 개선 등 긍정적인 면이 크므로 향후 더욱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7.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성,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지역대표박물관과 미술관을 전산망으로 연결, 추진하여 박물관 상호간 정보교류와 교차전시 등을 추진하여 오래된 유물전시로 지역주민에게 외면당하기 쉬운 전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박물관회 등 민간차원의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어 박물관·미술관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박물관협회 차원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8. 국제교류 확대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과 문화적 교류를 추진해 왔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치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멕시코 국립박물관에 한국관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중심의 교류를 유럽이나 제3세계 국가로까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4년 10월에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세계박물관계 인사가 약 2000여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박물관 교류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9. 남북한 교류의 확대

그 동안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있었지만, 정부차원의 박물관·미술관 교류는 거의 없었다. 남북한 문화교류는 지금까지 공연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맞춰 추진 되어야 하지만, 머지않아 북한의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북한과 박물관 학술대회의 개최가 활성화되어 서로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10. 관광자원화 및 문화상품 개발, 보급

전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선정, 순회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일반여행사 등과 협조를 추진하여 관광안내 책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비디오, 슬라이드, 출판물 또는 복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과 문화상품화를 지속 연구, 개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V. 맺는말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21세기 문화의시대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국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프랑스의 기·소르망은 문화에 있어서 '국가정체성(Identity)'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이 없는 나라는 타문화에 흡수 또는 종속되어지게 된다' 주장하였다. 20세기의 치열한 무역전쟁을 거쳐 이제 21세기 문화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문화적 정체성' 살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박물관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재 도약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문화예술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세제 지원 확대,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박물관·미술관은 이러한 사회환경변화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조직관리, 작품 수집, 전시, 교육 등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97년 10월 착공 이후 5월 3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차질 없는 개관이야말로 지금 정부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다.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대규모의 새 국립중앙 박물관이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시공사와 유물 확보, 전시 및 보존처리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